

전북도, 추석명절자금 앞당겨 준다

취약계층 위한 자금 각종 건설공사 등 1693억원 최우선 집행

전북도가 추석명절을 맞아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석명절 재정자금 집행을 확대하여 운용하기로 했다.

6일 도에 따르면 행복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사회복지생활시설 차례상차리기 지원비, 취약계층 기초연금과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등 취약계층을 위한 자금과 각종 건설공사 1,693억원을 최우선으로 앞당겨 집행하게 된다.

세부 집행내역으로는 기초노령연금 327억원 등 총 사회복지 예산 857억원, 배수 개선사업 338억원, 계곡~신덕간 국지도 확포장 공사 34억원 등 건설공사 대금으로 536억원, 기타 농·축산분야 사업비와 인건비 등에 300억원 정도를 민생경제 각 분야에 고루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집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도는 추석명절 자금집행을 위하여 정기예금 등으로 보유한 자금 중 1,000억원을 대기자금으로 관리하고, 사회복지 지원, 물품 및 공사 대금 등 자금청구에 맞추어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공사현장의 하도급 대금과 노임의 체불여부를 확인하여 대금



순창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6일 순창 전통시장에서 열린 추석맞이 장보기 행사에 송진진 도지사와 황숙주 순창군수가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온누리상품권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있다.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는 순창을 시작으로 김제(8일), 전주(12일), 군산(12일)에서 전개될 예정이다.

이 미지급된 현장에 대하여는 자금집행을 독려하고, 하도급사에 대한 대금지급 지연·체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현장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

이다. 도 관계자는 "추석 명절 전 신속한 자금 집행으로 지역 업체의 자금유동성을 지원하고 복지시설의 원활한 운

영을 도모해 소외받는 도민이 없이 모두가 행복한 명절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도, 오는 23일까지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구제 핫라인' 가동

전북도가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구제 핫라인'을 운영한다.

6일 도에 따르면 추석 명절을 맞아 각종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오는 23일까지 소비자 피해구제 핫라인을 가동한다.

핫라인은 소비자 전문상담원을 배치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인터넷으로 접수·운영하는 소비자 피해구제 창구다.

추석을 앞두고 인터넷쇼핑몰의 사기 판매, 택배운송 중 파손·분실·배송 지연, 농수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등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해외여행객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여행 관련 소비자피해 발생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소비자 피해 품목 중 택배서비스와 선물세트, 상품권, 인터넷쇼핑몰 등의 피해에 대해 집중 처리할 예정이다. /고민형 기자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즉각 중단하라"

전북교총 "무주·진안 등 5개 해당... 지역 교육 고사 위기 피할 수 없다"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즉각 중단하라"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전북교총)가 6일 이같이 말하며 강제적인 교육지원청 통·폐합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북교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소규모 교육지원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과 노력은 필요하나, 가뜩이나 농산어촌 교육환경이 어렵고 도시로의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지역 교육 지원과 활성화를 책임질 교육지원청마저 통·폐합된다면 해당 지역의 교육은 고사 위기를 피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교육부 기준대로라면 전북 지역은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등

5개 교육지원청이 2019년 4월1일까지 인구수 3만명, 학생 수 3,000명을 넘지 못하면 교육부가 요구하는 교육지원청 통·폐합 기준에 해당되어 통·폐합을 피할 수 없게 된다"며 "농산어촌 지역 교육 활성화만이 국토와 교육의 균형 발전과 귀농정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전북교총은 "소규모 교육지원청의 일률적 통·폐합 강행 저지에 나서는 이유는 무엇보다 지역 교육 기회 약화 및 체제가 우려되고, 해당 지역주민과 교육계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교육지원청과 학교가 없는 지역에 귀농을 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또 도시 지역에 비해 교육환경이 어려운 지역은 오히려 국가 차원의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도 외면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농산어촌 지역주민들과 교육계는 비록 학생·학교 수는 적지만 그 량수급 관할 지역이 넓은 만큼 교육행정서비스와 더 많은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며 "교육·문화의 중심점 역할을 하는 교육지원청이 여타 지역과 통합됨에 따른 지역주민의 박탈감을 수반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히 교육지원청 통·폐합과 관련해 지역 주민, 지자체와의 의견 수렴을 반드시 거쳐야 하며,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을 막기 위해서는 전북교육청의 의지가 중요한 만큼 농산어촌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책 마련과 함께 통·폐합 저지에 앞장서 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고민형 기자

'밥+커피' 3만원 넘어도 위반

권익위, 김영란법 안내서 홈페이지 공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이 6일 의결됨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 안내서(매뉴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또한 학교와 언론사 등 적용 직종별 안내서와 사례집도 공개할 계획이다.

권익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영란법 적용대상 기관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 학교·학교법인 등 언론사 등 모두 4만여곳이다. 다만 국가기관의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권익위는 안내서를 통해 적용대상자들이 자칫 혼동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들었다. 일례로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접대 받고, 주변 카페에서 커피를 제공받았다면 김영란법을 위반하게 된다. 식사접대행위

와 음료 접대 행위가 시간·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커 1회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골프장 등의 경우 선물이 아닌 '편의제공'에 해당, 가격기준 5만원 이하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공직자에게 금지된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공직자가 자신이 속한 공공기관 주최 행사에 경품 협찬을 요구하는 것도 김영란법 위반이다.

제3자가 위반행위를 발견, 신고하기 위해서는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또한 증거 등도 제출해야 한다.

포상금의 경우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공익 증진을 가져온 경우 2억원 이하로 지급된다. 보상금은 직접적인 수입 회복이나 비용 절감을 가져올 경우 지급한다. 보상금 지급한도액은 30억원이다. /뉴스시스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전북 31명 출전

'2016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에 도내에서 30여명의 학생이 출전해 귀추가 주목된다.

6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장애학생 31명이 이날부터 이틀간 더케이이경주호텔에서 열리는 '2016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에 참가한다. 이번 대회 참가 학생들은 자체 예선

대회를 거쳐 선발된 정보경진 영역 14명, e스포츠 17명이며 지도교사와 학교 관리자가 함께 참석한다.

올해 14회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장애학생의 정보화 능력 신장 및 건전한 여가생활 개발에 그 목적을 두고 매년 개최되고 있다. /고민형 기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방식 '개선'

도교육청, 전액 지원방식 등 계획안 마련 2학기 시범 운영

전북도교육청은 전북도청과 함께 친환경농산물·쌀 학교급식 지원 개선 시범 운영 계획안을 마련해 2학기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계획안을 보면 초중고등학교의 친환경 농산물 구입비 지원방식이 전액지원방식으로 바뀐다.

기존에는 일선 학교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할 경우 해당 가격만큼 차액 지원했다. 또 친환경 학교급식 관련 사업도 종래의 친환경 농산물과 쌀로 나누어 있던 것을 친환경 농산물로 단일화한다. /고민형 기자

기존 도내산 친환경 농산물만 구입하도록 한 것도 전체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예산의 10% 이내에서 제주도산 친환경 감귤을 구입하도록 하는 등 친환경 농산물 구입 품목이 확대됐다. 친환경 농산물 예산에서 10%를 초과할 경우 무상급식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2학기에 이 같은 방식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친환경 농산물 구입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경우 내년엔 확충·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립전주박물관, 유네스코 음식달의도시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